

광주·전남 교원 성범죄 '기가 막혀'

6년간 학생 대상 44건으로 17개 시·도 중 3·4위... 성희롱·불법 촬영 등 '그루밍 성범죄' 가능성

광주·전남 지역 초·중·고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 건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3, 4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광주 초·중·고 교원(교직원, 교사 포함)이 학생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 건수는 44건이었다. 이는 경기(89건), 서울(82건)에 이어 전국 3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광주는 2019년 12건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0년 6건, 2021년 3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팬데믹이 끝나고 정상 등교가 시작된 이후 2022년 9건, 2023년 12건으로 늘었다. 2024년 현재 2명이다.

가해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추행 11건, 성폭력 2건, 기타(사이버성폭력, 불법 촬영 등) 2건 순이었다.

전남은 2019~2021년 3년 동안 자료를 집계하지 않았으나, 2022~2024년 3년간의 건수만으로 33건

에 달해 전국 4위에 해당했다.

전남에서는 2022년 15건, 2023년 13건, 2024년 5건 등 해마다 두자릿수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성폭력 사건을 가해유형별로 구분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

진 의원은 광주·전남을 포함한 교원이 저지른 성범죄 중 상당수가 '그루밍(Grooming·갈듬이기) 성범죄'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가해자를 잘 따르도록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성범죄다.

교원이라는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 학생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기 쉬운만큼 그루밍 성범죄가 일어날 위험성도 크다.

각 교육청이 제출 자료에 따르면 '피해학생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한 경우', '교사가 학생에게 옷, 음식을 사주겠다고 하고 손을

만진 경우', '카톡으로 사랑한다, 키스하고 싶다고 발언한 경우', '수업 중 초등학생인 학생에게 "사랑한다"고 귓속말을 하며 강제추행을 한 경우', '불, 이마를 맞대거나 뽀뽀한 경우', '교사가 여학생의 손을 잡으며 좋아한다고 발언한 경우' 등 범행이 주류를 이뤘다. 이는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로 추정되는 사례라고 진 의원은 설명했다.

진 의원은 교육부는 물론 17개 교육청 모두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 대상 교원의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성범죄 예방 교육·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특히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학생과 가족도 학생이 성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11일 광주시 동구의 광주천과 5·18민주광장을 잇는 서석로 노상주차장에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광주시 동구는 2025년까지 이곳의 주차장을 폐지하고 차로 수를 줄여 보행로를 넓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대·자·보 광주' 문화전당~광주천 서석교 보행로 확장

2025년까지 차로 축소

광주시 동구가 총장로 도심에서 '걷기 좋은 길'을 만들기 위해 보행로 확장 사업을 추진한다.

동구는 지난 2월부터 '서석로 보도 확장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라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문화전당에서 광주천 서석교까지 458m 길이의 도로에서 차로 수를 줄이고 인도 폭을 넓혀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를 재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구는 이번 사업을 광주시가 추진 중인 '대·자·보 사업'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자)과 연계해 추진 동력을 얻겠다는 복안이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이며, 동구는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4억원을 확보했다.

동구는 지난 2월부터 '서석로 도로 다이어트'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기존 왕복 4차로의 시 소 유 도로에서 1개 또는 2개 차로를 축소해 보행로를 넓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1개 차로를 줄이고 가변형 3차로로 만들어 한 쪽 보행로를 기존 4m에서 6m로 늘리는 안, 2개 차로를 줄여 왕복 2차로로 만들고 양 쪽 보행로를 기존 4m에서 5-6m로 늘리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교통량 조사 결과 기존 사업 부지의 차량 통행량은 평일 기준으로 일 평균 1050여대 수준이다. 광

주천 방면 차량 통행량은 1차로 519.41대, 2차로 28.8대이며 5·18민주광장 방면은 1차로 512.5대, 2차로 32.3대다. 보행자 수는 평일 기준 시간당 40여명, 주말 80여명 수준으로 조사됐다.

웨딩의거리 앞 노상주차장(주차면수 27면)은 교통과 협의를 거쳐 폐지 수순을 밟기로 했다.

동구는 교통 전문가 자문,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는 10월까지 사업계획안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실시설계 및 착공까지 할 방침이다.

사업성공을 위해서는 서석로 주변 상인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해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폐기하라"

광주 시민단체 촉구

광주교육시민연대(연대)가 11일 주민 조례 청구로 접수된 학생인권조례(조례) 폐지안 폐기를 촉구했다.

연대는 이날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가운데에도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충한다는 깨달음을 확인해 온 교육계의 성과를 외면한 채, 조례 폐지안 청구를 주도한 특정 종교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광주시의회는 조례 폐지안을 폐기하라"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주민 조례 청구로 접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수리 결정을 내림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

육문화위원회로 상정됐다.

연대는 "조례 폐지안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제시하는 교육기본권과 그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라며 "더구나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권 등 상위법을 위반하는 등 주민조례발안법 제4조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해 논쟁할 가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례 폐지안이 통과된다면 학생들이 인권 상담, 구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한 민주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 구제 소위원회 등 행정기구가 없어지게 된다"며 "시의회 운영위는 '청구인 명부가 이상이 없다'는 강변만 늘어놓을 뿐 법령 위반 여부 등 청구 대상에 대한 사전 검토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동구청~조선대 도로 공사장서 음성 유적 발견

집터·창고터...국가유산청 판단 따라 공사 지연 가능성도

광주 동구청 일대 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서 광추음성 유적이 발견됐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동구청~조선대학교 사거리 375m 구간 확장 공사 부지에 포함된 서석동 27-3번지 일대에서 광추음성 집터와 창고터 유구가 확인됐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해당 구간에 광주시 문화재자료 제20호인 광추음성 유적이 있어 시굴 조사가 필요하다는 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매장 문화재 시굴·정밀 발굴 용역 조사를 진행해왔다.

용역 결과를 보고받는 국가유산청에서 이곳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중요문화재가 추가로 발굴되면 공사가 지연 또는 중단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광추음성은 고려시대인 1378~1379년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고을을 방어하고자 평지에 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구 광산동과 서석동 일대로, 인근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주변 광산길(ACC-전남대병원 일광동행로) 확장 공사 현장에서도 고려·조선시대 토기류 30점이 발견됐다.

광주시는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 총사업비 142억원을 투입해 왕복 4차로인 동구청~조선대입구 도로 폭을 20m에서 30m(동구청 방향 3차로·조선대 방향 2차로)로 늘리고 인도 폭도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굴 조사로 확인한 유적 현황과 추정 연도를 분석해 이달 말까지 국가유산청에 용역 조사 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가유산청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밀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남구의회 '투표용지 촬영 의혹' 의원 4명 고발

공무원 노조, 의회 파행 규탄

광주시 남구의회가 후반기 의정활동을 앞두고 '밥그릇 싸움'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는 '남구의회 의원들은 부끄러움을 알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의회 파행으로 인해 조례안 심사 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구정 치질이 불가피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며 "즉시 의회를 정상화시키고 의회 파행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파행의 배경으로 지난 4일 상임위원장 선정이 꼽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길(다 선거구) 의원이 기획총무위원장에 당선됐으나 일부 의원들이 '불법 촬영' 의혹을 제기해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채 임시회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투표용지 촬영 의혹은 지난 4일 진행된 남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투표 도중 '기표소에서 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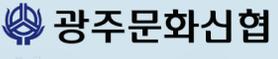
영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항의로 불거졌다. 휴대전화 촬영은 4명 의원이 기표소에 머무는 동안 흘러나왔다고 한다.

이에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은봉희(비례)의원 등 의원 6명이 동료의원 4명을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남구의회 의원 4명이 상임위원장 투표용지를 촬영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이 담겼다.

한편 고발당한 4명의 의원과 박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미 의장이 당선을 선포한 상황에서 증거도 없는 일방적 주장으로 (후반기 원구성)이 파행으로 치달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고발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남호현(가 선거구) 의장에 대해 "갈등과 불화를 중재·조정해야할 의장이 근거도 없이 동료의원을 불법자로 단정하고 있다. 의장은 의장의 역할과 본분을 망각하지 말라"고 유감을 표했다.

/장해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